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 상원, 금융개혁법안 승인

- 미 상원은 지난 20일 금융개혁법안을 승인했으며, 이번 개혁안은 1930년대 이후 가장 규모가 큰 금융규제안 개정으로 평가됨.
 - 금융개혁법안은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대형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던 법안으로 오랜 논란 끝에 59대 39로 상원에서 통과됨.
 - 금융개혁법안은 상원 통과에 앞서 2009년 12월 하원에서 승인된 바 있고, 향후 상원과 하원의 절충안이 완성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으로 입법 절차는 마무리됨.
- 상원의 금융개혁법안은 파생상품거래규제, 소비자보호기구 신설,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대형 금융기관 감독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, 여러 금융시장 이해당사자들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 - 신용평가사들은 책임이 커지고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, 소형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지 않는 반면 대형은행들은 자기자본 거래가 금지되고 소비자금융보호청의 감독을 받아야하는 등 규제가 강화됨.
 -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는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게 되고 소비자보호기구를 산하에 두면서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.
- 금융시장에의 충격을 우려해 동 법안에 반대했던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통과된 법안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데 안도하고 있으며, 앞으로 상원과 하원의 절충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.
 - 상원의 법안은 대마불사(too-big-to-fail)로 인식되는 대형은행들의 해체 등 대형은행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거부 했으며,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 설정,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완전한 분리 등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안도함.
 - 은행관계자와 애널리스트들은 금융개혁법안이 금융회사의 이익을 축소시킬 것이지만 금융회사의 규모나 영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까다로운 몇몇 조항들이 최종 승인 이전에 변경될 것으로 기대함.

(NY Times, 5/24 등)